탈출구 안 보이는 화물연대 파업에 "공장 문 닫을 판"

산업계 일부 생산설비 중단 움직임
주요 업종 출하 차질 규모 1.6조
철강업계, 태풍 이후 어려움 가중

공공운수노조가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가책임 강화, 국민안전 실현, 민영화 및 구조조정 중단, 공공성 및 노동권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을 넘어서면서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생산설비의 가동 중단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장기화조짐을 보이고 있어 피해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약 일주일간 주요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1조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업종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열고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의 출하 차질 규모가 1조 6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는 밝혔다. 산업부는 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 출하 차질이 생산 차질로 연결돼 피해 규모는 막대해질 것으로 진단했다.

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철강업계로 집계됐다. 국내 철강업체들이 하루 10만톤 가량의 철강재를 출하하지 못하면서 업계 누적 손실액은 1조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강협회는 "화물연대 파업 이후 29일까지 제품 총 60만톤을 출하하지 못해 약 7800억 원의 매출 이연 손실이 났다"고 밝혔다.

이는 톤당 평균 가격 130만원을 곱해 산출한 수치다.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집계된 만큼 1일까지 단순 계산하면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공장 가동을 멈추진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 6월 파업 당시에도 철강업계는 파업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피해규모 1위를 기록했다. 포스코, 현대제철을 포함한 국내 5개 철강사들은 8일 동안 72만1000톤을 출하하지 못하면서 피해액만 1조1500억원에 달했다.

특히 국내 철강업계가 지난 9월 태풍 상륙 이후 수해를 수습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이라는 암초를 만나 경영 정상화에 '적신호'가 켜졌다.

석유화학업계도 이번주 들어 출하 차질이 본격화했다. 정유는 대체 탱크로리(유조차) 확보 등 출하량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지만 품절 주유소가 수도권에서 충청, 강원 등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어 국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모든 수단 검토하는 상황이다. 약 4000억원대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됐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업체별로 최소 규모 출하(평시 대비 10~30% 수준)가 지속되고 있고 출하가 전면 중단된 대산,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일부업체의 경우 이번 주부터 생산량 감산을 고려하고 있다.

시멘트의 경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 복귀 차주가 늘어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당초 우려되었던 생산 중단 가능성은 축소됐다. 이에 따라 금액환산 976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자동차 업계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로드 탁송'(완성차를 직원이 직접 운송하는 방식) 등 인건비와 운영비주가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업계 전체적으로 하루 5억원이 넘는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타이어업계는 공장 셧다운도 검토하고 있다. 타이어 제품 출하가 막히면서 공장 내에 재고 물량을 쌓아두고 있지만 적재공간이 한계치를 넘어서면 생산을 중단해야하기 때문이다.

한국타이어의 대전·금산공장은 하루 타이어 생산량 10만본 중 입출고가 평상시 대비 30%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공장 내 재고 물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날 입출고는 컨테이너 30여 대 수준으로 평소 80여 대 분량 대비 절반 이하까지 떨어졌다. 그나마 한국타이어는 국내 2개 공장 외에 중국, 헝가리, 인도네시아, 미국 등 해외 생산기지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수출 타격은 미미할 전망이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원·부재료 재고가 바닥나면서 일부 라인은 이날부터 6일까지 타이어 생산을 줄인다. 이날 광주와 곡성공장에서 하루 생산량 8만본 중 최대 30% 수준까지 감산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넥센타이어 역시 양산과 창녕공장에서 생산되는 하루 8만본 물량에서 4만본 수준을 제때 출하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상황에 따라 감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계 관계자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수출과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내년 한국 경제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정부, 정유 '업무개시명령' 만지작… 노동계 6일 총파업 '맞대응'

전국 유류 품절 주유소 20곳 넘어
정부, 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압박

정부가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자 노동계는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예고했다. 당장 2일부터는 철도노조 파업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노정 관계는 극으로 치닫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며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시멘트에 이어 유류제품 수송도 지연되고 있어서다. 전국에 유류가 품절된 주유소도 20곳 넘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주유소 재고, 대체 수송 여부를 파악해 대응 중이다.

산업부는 이날부터 전국 주유소에 군용 탱크로리와 수협 보유 탱크로리 18대를 긴급 투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류 품절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정유 업종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외국적 선박의 국내 연안 운송을 일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30일 정부와 화물연대 간 2차 협상도 결렬되면서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연안해운산업 보호 등을 위해 외국적 선박이 자국 항만 간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우리나라도 부산항~광양항과 인천항~광양항 구간을 제외하고 외국적 선박의 연안 운송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화물연대가 계속해서 현장 복귀를 거부할 경우 최저임금 성격의 '안전운임제'의 완전 폐지도 검토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이자 위헌"이라고 반발하며 더 강력한 총파업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당장 2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시멘트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철도노조 파업으로 운반이 막힐 경우 공장 가동에 차질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이어 민주노총은 오는 3일 서울과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6일에는 전체 조합원이 참여해 전국 동시다발로 총파업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탄압을 노동자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한다"며 "총파업 대오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전체 조합원이 나설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中企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 법 집행"

중기중앙회, 경제부총리 초청 간담회
부총리 "예산개편안 기한 통과 당부"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앞줄 왼쪽 5번째부터)추경호 부총리,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에 대해 호소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 법정 기한(2일) 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로 중소기업의 수출길이 막혀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고 있다"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민간시장뿐만 아니라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간담회에서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기준금리 변동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신용경색에 따른 한시적 신·기보 보증한도 확대 ▲시설자금 차입금 분할상환금 탄력적 운용 ▲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 연동제 확대 적용 ▲구리 스크랩 유통 양성화 위한 소득세 원천징수 ▲MAS 2단계경쟁 적용기준 상향 ▲해외판로지원사업 부가세 면제조항 신설 등 8건의 현장건의를 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관세 간이정액환급 대상 범위 확대 ▲스마트공장 예산 증액 ▲TRQ 물량조정 및 할당관세 적용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연장 ▲부정당업자 행정제재 완화 ▲공공조달분야 제값받기 환경 조성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상생협력 중소기업협동조합 출연금 지정기부금 인정 등 10건의 서면건의도 있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마련한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이 9월에 국회에 제출됐으나 논의가 지연돼 법정 기한이 내일로 다가왔다"며 국회에 내년 예산 통과를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사업계획 공고, 지방비 확보 등 후속 절차도 늦어져 정부가 마련한 민생·일자리·중소기업 지원예산 등의 연초 조기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면서 "이럴 경우 서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 회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법정기한 내 조속한 확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 여건과 관련해선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며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는 전 산업 생산이 30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고 제조업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가운데 10월에는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